

17개 시·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-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

- 행안부, 2월 6일(화)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 개최
- 보탬이(e)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합동 현장점검 추진

-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지방보조금 집행에 보탬e(지방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)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.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사항,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예금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는 요령 등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홍보했다. 특히, 경남 함안군은 보조사업운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·감사·사업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‘울인원 보조금 도움 서비스’가 보조금업무 전 과정과 절차를 자문했다.
- 전라북도는 '23년부터 보조사업 사업종료 시 정산 전 자체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. 또한 최근 5년간 정산·반납 현황을 종합점검하여 장기간 미반납·미정산 사업에 대해 도·시군 합동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기울였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2월 6일(화), ‘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책임관 회의’(이하 관리책임관)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·도 관리책임관(예산부서장)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,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.
- 특히,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,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-지방 협력체계, 지방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보탬이(e)의 부정징후 탐지기능(FDS, Fraud Detection System, 이상거래 탐지시스템) 활용을 논의하였다.

-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탐이(e) 교육 강화(경남), 지방보조금 사전예방·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(전북),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(강원),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(제주)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.
- 올해 하반기부터,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지자체 감사부서,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탐이(e)의 부정징후 탐지기능('24.4월 개통 예정)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.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「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여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·운영하도록 하고,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('23.10.25. 신설)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
-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(예산부서장)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	책임자	단 장	조현혜 (044-205-389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형구 (044-205-3894)

